

인권현대사_병역거부 운동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병역거부자)

1. 2000년대 이전의 병역거부

I. 병역거부, 아주 오래된 평화운동

서기 295년, 지중해 남쪽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지금의 알제리)에 당도한 로마군은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젊은 남자들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신은 기독교 신자로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세계 최강 로마군에 입대하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당시는 기독교가 아직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지 못한 때였다. 그는 결국 로마군에 처형당했다. 그 남자 이름은 막시밀리아누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병역거부자 되었고 오늘날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다.

막시밀리아누스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종교인들이 이어오던 병역거부가 대중적인 평화운동으로 등장한 것은 제1차세계대전 때였다. 수많은 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전쟁은 참호전이라는 전투 방식으로 유명했다. 그것은 서로 적대하는 전선을 마주하고 적의 총알을 피하기 위해 땅에 참호를 파고 들어가 앉아 교전하는 방식이었다. 전진도 후퇴도 없는 길고 지루한 교전이 이어지면서 참호 안팎으로 죽은 군인의 시체가 쌓여갔다. 지금이야 미사일과 드론으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군인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군인, 특히 징집된 보병이었다. 평화운동가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만약 전쟁터에 군인이 없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참호전의 참상에서 이런 상상을 떠올린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른다. 이 상상력이 현실로 발현된 것이 바로 병역거부 운동이다.

이후 주요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병역을 거부했다. 한국 전쟁 당시 징집을 거부한 영국인 존 콘스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았고 대체복무로 전쟁이 끝나 폐허가 된 한국 군산에서 의료 활동을 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존 콘스는 2013년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 훈장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복싱 세계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인기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소설가 조지 R.R. 마틴 등이 병역거부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지만, 일부는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수감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전쟁에 저항하는 병역거부도 멈추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은 전쟁의 참상을 보며 병역거부를 했고, 한국에서도 강철민 이병이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했다.

II. 한국의 병역거부자들: 일제시대부터 유신시대까지

한국 병역거부의 역사를 개척한 것도 종교인들이었다. 1939년 일본은 일본열도와 조선반도의 여호와의증인을 전부 잡아들였다. 불경죄라는 죄목이었는데, 여호와의증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징병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인 여호와의증인이 50명을 넘지 않았는데 66명

이 구속 수감되었으니 여호와의증인 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잡혀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이 일은 일명 등대사 사건으로 우리 정부가 편찬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당시 조선인 여호와의증인은 징병을 거부해서 구속된 것은 아니다.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를 실시한 것은 그보다 5년 뒤인 1944년이었다. 하지만 여호와의증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과 병역거부를 거부하는 것이 같은 종교적 양심의 맥락에 놓여있고 만약 여호와의증인 신자들이 1939년에 모두 수감되지 않았다면 1944년에 병역거부로 구속수감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병역거부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조선인 여호와의증인들이 잡혀갈 때 일본인 여호와의증인도 전원 검거되었는데, 그들은 신사참배 거부와 더불어 징병 거부가 구속의 주요 이유였다.

여호와의증인은 해방 이후에도 병역거부를 이어간다. 한국 전쟁 때는 남북한 모두에서 병역거부를 했다. 노병일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의 징집을 거부하면서 총살 위협을 당했지만 끝내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 박종일은 국군의 징집을 거부해 전쟁이 끝난 뒤인 1953년 재판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 때도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은 이어졌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병무청에 징집률 100%를 달성할 것을 지시했고, 병무청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병역거부자들을 무리하게 훈련소로 끌고 가 강제로 입영시켰다. 훈련소에서 총 들기를 거부하던 병역거부자들은 항명죄로 처벌받았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최소 5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사망했다.²⁾ 한편 이때는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반복처벌을 당했다. 훈련소에서는 집총 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려 거부할 때마다 가중 처벌을 했고, 입영영장이 반복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다. 가장 오래 복역했던 정춘국은 3차례에 걸쳐 모두 7년 10개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다. 우리나라는 같은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는데, 유신시대에는 국가 권력이 범마저도 무시하고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행했었는데 병역거부자들도 시대의 폭풍을 겪었다.

III. 군인들의 양심선언: 1980년대~1990년대 초반 군인들의 양심선언

병역거부는 민주화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은 제도권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영역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군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7년 이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 50여 명의 군인들이 이른바 양심선언을 했다. 양심선언의 이유는 다양했다. 백골단 해체, 병영민주화, 군대 내 구타 금지 등 정치적인 주장을 한 군인도 있었고, 군 입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정보기관의 프락치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에는 한국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군복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평화주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명백하게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거부 운동의 중요한 역사다.

1) 「여호와의증인 연감 1988」을 보면 1932년 6월 한국에서 처음 열린 여호와의증인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45명이라고 나온다. 이를 토대로 1939년 당시 여호와의증인 교단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5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연합뉴스, 2009/01/16, 「"집총거부" 軍사망 국가책임 인정」 <https://news.v.daum.net/v/20090116162113865> (최종 검색일 2019/11/22)

2. 병역거부운동, 한국 사회를 뒤흔들다

1. 인권운동, 병역거부에 주목하다

1) 병역거부 운동이 등장하기 어려웠던 이유

여호와와의증인이 꾸준히 병역을 거부했지만 사회운동화 되지 못했고 인권운동의 의제로도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그 배경을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군사안보이데올로기와 군사주의이다. 20세기 초반 일제 강점기 35년을 거치고, 해방 이후에도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베트남 전쟁 참전과 남북한의 크고 작은 군사 갈등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강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군사안보 분야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쉽게 몰렸고, 군대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의 위치에 올랐다. 군대를 거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였고, 만약 누군가 군대를 거부한다면 감옥에 가는 게 마땅한 일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와의증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 수혈 거부 등과 더불어 병역거부는 여호와와의증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했고, 그 결과로 병역거부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편견은 아주 강력했는데, 인권활동가들조차 여호와와의증인들이 병역거부로 해방 후 약 1만 명이 감옥살이를 했으며 한 해에 천 명이 넘게 수감된다는 사실(2000년 기준)을 잘 알지 못했다. 여호와와의증인에 대한 편견은 이후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병역거부를 하기 전까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해서 소수의 활동가 말고는 인권평화운동의 여러 단체들이 이 문제에 적극 뛰어드는 것을 저어하게 만들었다.

2) 병역거부 운동의 시작

세기말은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총회에 반대하는 반세계화 시위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지구적인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센 시기였다. 2000년에 한국에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하 아셈)가 열렸을 때도 전 세계 사회운동가들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아셈피플스포럼이라는 대안적인 행사를 조직해 맞섰다. 이 아셈피플스포럼에 참석한 미국친우봉사위원회의 활동가가 한국의 활동가에게 병역거부 운동을 제안했던 것이다. 당시 대안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는데, 한국도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군과 관련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이었다. 이를 계기로 평화·인권활동가들이 병역거부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온 자극도 있었고, 한국 사회 내부의 조건도 뒷받침됐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인권운동의 성과로 다양한 소수자들이 가시화 된 것은 병역거부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인권담론은 군사안보이데올로기에 맞서 초기 병역거부 운동에 논리를 마련해주었다.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는 성역이었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되어 주었다. 수많은 병역거부 수감자들이 쌓아온 역사적 시간 또한 이 문제가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어 왔고 당시에도 피해받고 있다는 사실, 게다가 그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이라면 더더욱)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다는 것이 초기 병역거부 운동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3) 병역거부 연대회의의 결성

한국 사회에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널리 알린 것은 시사주간지의 기사였다. <한겨레21> 기사 '차마 총을 들 수 없었어요'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은 실로 대단했다.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아무도 몰랐던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순식간에 각종 시사 토론회의 단골 주제가 되었고 대학입시 논술문제에서도 병역거부는 단골 기출문제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비해 병역운동의 진도는 더뎠다. 캠페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사회적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연대체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당사자라고는 여호와와의증인 밖에 없었는데, 그들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편견에 더해 사회운동에 거리를 두는 여호와와의증인의 특성 때문에 연대체에 참여하려는 단체들이 많지 않았다.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이 등장하고 나서야 이후 병역거부 운동의 중심이 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구성할 수 있었다.

II. 병역거부 운동 등장의 사회적 의미

1) 헌법상에만 존재하던 양심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19조)

이렇게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양심의 자유가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사상전향서 때문이었다. 양심수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사상전향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준법서약서가 대신했다. 준법서약서는 강제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사상전향서보다는 훨씬 덜했지만,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였다.(조국, 2001: 39)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반성문을 강요당하는 일이, 회사원들이 직장에서 자기 잘못도 아닌 일에 거짓말로 경위서를 가장한 반성문을 써야하는 일이, 군대에서 부당한 명령을 강요받는 일들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병역거부 운동은 이 양심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민거리로 끌어올렸다. 특히 비전향 장기수들이 겪은 사상전향서는 물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일상과는 떨어져 있는 일처럼 느껴졌다. 반면 병역거부는 훨씬 더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로 다가왔다. 군복무는 비장애인인 한국 남성들이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향해 발포한 역사와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한국 군대의 실상을 고려한다면 부당한 명령과 감등하는 양심의 문제는 분명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2) 병역사회에 의문을 던지다

한국은 사회 곳곳에 군대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는 병영국가였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1960년부터 거의 30년간 군부 독재가 이어졌고, 6월 항쟁 이후 직접선거로 집권한 대통령도 군 출신의 노태우였다.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학교나 회사에서도 군대식 문화는 유효했다. 기업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군대식 열차려나 행군을 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다.³⁾ 학생주일이 지키는 정문을 지나면 운동장이 나오고 교장선생님이 애국초회를 진행하는 구령대가

3) 중앙일보, 2018/01/23, "군대식 신입사원 연수, 아직도?"
<https://news.joins.com/article/22308725> (최종 검색일 2019/11/22)

운동장을 내려다보는 학교의 구조는 위병소를 지나 연병장의 중심에 사령대가 있는 군대의 구조와 닮았다. 커다란 비극이었던 한국 전쟁 이후로도 북한과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을 겪으면서 전쟁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가 사회에 만연했다. 이 공포는 군사안보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사회의 다른 가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에서도 이런 군대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독재정권의 경찰과 맞서기 위해 학생운동은 사수대를 만들었고, 사수대는 군사훈련과 다를 바 없는 훈련을 수행했다. 사수대 내부에선 군대처럼 위계에 입각한 강한 군사주의 문화가 작동했고 이는 사수대를 넘어서 학생운동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군대에 다녀온 남성들이 중심이 된 노동운동도 투쟁 방식이나 조직 구성에서 자연스럽게 군사주의 문화가 드러나곤 했다. 이처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철용성 같은 병영사회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처음으로 등장한 이물 짝이었다. 한국의 초창기 병역거부 운동이 평화주의 이론을 충분히 섭렵했거나 병역거부자들과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강하게 평화주의자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병역거부자의 등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반론과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던 완벽한 세계가 이제 균열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3. 평화의 목소리를 들어라, 다양한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I. '전쟁없는세상'의 결성

2001년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군 입대 말고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줬다. 비록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군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병역거부자들은 비공개 모임을 만들어 서로 상담도 해주고 함께 공부도 했다. 당시에는 한국어로 된 병역거부 관련 자료가 드물었고, 해외 사례도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았으니, 혼자서 세상과 맞서기는커녕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나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혼자서 준비하기는 버거웠고, 함께 모여서 스스로 길을 찾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자구책이었지만 이는 병역거부가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 평화운동으로 발전하는 씨앗이 되었다.

병역거부자들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시 사회의 큰 이슈인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병역거부자들 스스로도 병역거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자유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게 답답했는데, 이라크 전쟁과 파병은 군대에 입대하고 군인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현실적인 감각으로 다가오게 했다. 결국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이고, 한국군의 파병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내 삶과 직접 연결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병역거부는 평화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지키는 행동인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감각이 병역거부자들에게 생겨났다.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양심의 자유 보장에 더해 군대와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목표였지만,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고 한국군이 파병되는데 나만 대체복무로 군대 안 가면 될 일이 아니었다. 전쟁에 저항하고 전쟁을 막아서는 메시지를 병역거부에 담

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각은 현실이 되었고, 병역거부자들과 후원자들, 평화활동가들이 모여서 평화운동 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을 결성했다. 2003년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이었다.

II.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의 등장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파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한 사람은 '전쟁없는세상'의 병역거부자들만이 아니었다. 2003년 가을, 강철민은 신병 휴가를 나와서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기독교 회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자신은 애국자이며 외국 군대가 한국을 침입하면 자신 입대해서 총 들고 싸우겠지만, 침략전쟁인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군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록 가장 낮은 계급인 이등병이지만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라크 파병 철회를 촉구한다며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불과 2년 전 오태양이 최초로 공개적인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이었다.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 선언이라는 점이다. 오태양과 그 이후 병역거부자들은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군입대 자체를 거부했는데 강철민은 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군대에 입대했다. 하지만 군 생활 도중 군대의 특정한 판단이나 명령이 자신의 양심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를 하게 된 것이다.

강철민처럼 특정 전쟁이나 특정 군사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을 '선택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 병역거부자들보다 선택적 병역거부자들이 훨씬 많이 존재했다. 선택적 병역거부자들은 평상시에는 병역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다양한 이유로 병역거부를 고민하게 된다. 실제 전쟁에서는 내가 타인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현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살상행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갈등하게 될 수 있다. 강철민의 등장은 병역거부가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들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선택적 병역거부가 더 많은 사람들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군대가 저지른 여러 잘못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부추기기도 했다. 예컨대 부당한 명령을 군인이 거부하는 것이 병역거부의 권리로 인정되었다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계엄군 중에 몇 명은 광주시민에게 발표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편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병역거부 운동에 반전(反戰)의 의미를 불어넣었다. 오태양을 비롯한 2000년대 초반 병역거부자들은 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지 말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주장을 펼쳤다. 물론 그들은 평화주의자였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의 극심한 편견 때문에 전략적으로 평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강철민의 주장은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강철민의 병역거부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전쟁을 지금 당장 중단시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의 의미가 부각되었다. 초기 병역거부 운동이 병역거부자의 수감을 문제 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했다면, 강철민의 병역거부로 병역거부운동은 전쟁을 막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다.

III. 다양한 병역거부자들, 평화의 얼굴을 그리다

'전쟁없는세상'의 결성으로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거부운동의 중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전까지는 평화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을 비롯한 인권단체들, 혹은 병역거부자 개인의 후원회에서 재판과정과 수감생활을 지원했다. '전쟁없는세상'을 기반으로 병역거부자와 평화주의자들이 한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자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되었다.

1)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의 등장: 민족주의자,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농민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은 학생운동 활동가들과 시민운동에 관심 있는 입영대상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비록 병역거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의 편견에 노출되고 감옥에 가야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지로 군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분명 커다란 변화였다. 초기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로 학생운동을 하거나 시민운동을 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병역거부를 통해 평화운동, 반군사주의 운동에 대한 고민을 키워갔다. 특히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당시 군대와 감옥 사이에서 고뇌하던 사람들에게 병역거부를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했다. 병역거부가 관념적인 차원에서 평화주의를 지키는 행동을 넘어서서 실제 진행 중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반전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여호와의증인들이 한 해에 600~700명씩 병역거부를 하는 동안 이러한 정치적 병역거부자들은 한 해에 4~5명 정도씩 꾸준히 등장했다.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도 점차로 다양해져갔다. 한국군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데 동포의 가슴팍에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청년, 자신은 평생 농사를 지을 건데 농사꾼이 낫질이 아니라 총질을 배워야할 이유가 없다는 농부, 한국군은 성소수자를 질병 취급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기 때문에 군대를 거부하는 성소수자,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하는 군대를 거부하는 페미니스트, 현대의 전쟁은 결국 가진 자들의 돈벌이일 뿐이고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군대를 거부한 사회주의자까지, 병역거부자의 면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져갔다.

2) 국가폭력, 병역거부의 배후세력
2000년대 초반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 소견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라면, 2000년대 중반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에는 평택 대추리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군사기지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난 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대가 시위대 진압에 동원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국가와 시민의 관계, 국가폭력의 양상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에 직접 혹은 암묵적으로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으로 갔다.

"더욱이 그 총부리는, 과거 광주에서 그랬듯 지금은 평택에서 묵묵히 고된 삶을 일궈오던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자 송인욱의 소견서 중에서(전쟁없는세상, 2014: 106)

국가 공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은 이후에도 병역거부자들이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동기가 된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폭력은 이경 이길준의 양심을 하얗게 태웠고,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 5명과 경

찰 1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같은 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파업노동자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경찰의 모습 또한 병역거부자들이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가의 모습은 폭력보다는 무능에 가까웠지만 안전과 안보가 무엇이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국가 공권력의 역할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으며 2014년 이후 병역거부자들은 세월호 참사가 던진 질문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병역거부를 하게 되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면 갖 스물의 젊은이들이 폭력적인 억압의 도구가 되어도 괜찮은가요? 그런 정당성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 병역거부자 이길준의 소견서 중에서(전쟁없는세상, 2014: 127)

"평택 대추리, 광주병 촛불집회, 용산참사 때의 전의경을 보면서 저는 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 병역거부자 문명진의 소견서 중에서(전쟁없는세상, 2014: 198)

이처럼 병역거부는 국가와 시민, 공권력과 국가폭력, 안보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다. 병역거부자들은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로 병역거부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병역거부자들이 한국사회에 던진 질문이 되었다. 국가에 대해, 폭력에 대해 던진 낯선 질문은 종종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물론 평화주의자는 어떤 면에서는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병역거부자들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행동으로 만들었다. 국가폭력에 동참하거나 동원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행동함으로써 국가폭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드러내고, 시민들이 국가폭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를 보여 주었다.

3) 탈조선을 꿈꾸는 이들: 병역거부 난민을 선택하는 사람들
병역거부자들은 오랫동안 편견과 오해에 시달렸다. 병역거부자를 싫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병역거부자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바라보았다. 한쪽에서는 비겁한 겁쟁이라고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다른 신념을 가진 용기 있는 영웅으로 바라보았다. 현실의 병역거부자들은 전적으로 어느 한쪽일 수는 없었고 양쪽 모두의 모습이 저마다의 양상으로 뒤엉켜 있었다. 폭력을 두려워한다는 면에서는 겁쟁이였지만, 도망가지 않았으며 당연하게도 비겁하지는 않았다. 다만 병역거부자들의 모습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띤다. 세상의 편견 때문에 올바른 모습만을 보이려 노력했던 초기 병역거부자들에 비해, 이후 병역거부자들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 두려움, 낙담 같은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맞서 싸우는 대신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병역거부 난민, 탈영병들, 합법적인 기피자들, 자발적 비전투복무자들 같은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들을 세계적으로는 회색거부자라 부른다.

이에다 써가 병역거부를 이유로 프랑스에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국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특히 병역거부 난민을 선택하는 이들이 생겼다. 2000년 이전의 진보적인 젊은 이들이 군대를 거부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던 것처럼, 초기 병역거부자들은 난민이라는 선

택지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에다 씨 이후로 병역거부자들은 난민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갖게 된 것이었다. 물론 병역거부 난민을 선택하고, 난민 심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 실제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이들은 지극히 소수다. 현재 병역거부로 난민 인정을 받은 한국인은 7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선택지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숫자다.

구분	도착 국가	난민 인정 사유	난민 인정 년도	보장 받은 권리
김경환	캐나다	병역거부, 성소수자	2009	거주권, 노동권
이에다	프랑스	평화주의 병역거부	2013	거주권, 노동권
K	호주	병역거부, 성소수자	2013	거주권, 노동권
L	프랑스	병역거부, 성소수자	2017	거주권, 노동권
K	프랑스	병역거부, 성소수자	2017	거주권, 노동권
K	캐나다	병역거부자	2018	거주권, 노동권
성명미상	캐나다	병역거부, 성소수자	2014	거주권

징병제폐지를위한 시민연대 정리

하지만 병역거부 난민이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그 숫자보다 훨씬 크다. 병역거부가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라면 병역거부 난민은 전쟁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다. 물론 이에다 씨처럼 자신의 평화주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병역거부 난민도 있지만, 난민을 선택하는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 조용한 방식으로 병역거부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마치 노동자들이 총파업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태업을 펼치며 저항을 하는 것처럼 병역거부 난민을 택하는 많은 이들은 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전쟁에 동참하지 않음으로서 전쟁에 대한 저항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와 행동은 그 자체로 한국의 병역거부 이슈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법에 호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4. 천천히, 꾸준히 변화를 만든다

I. 늘어가는 병역거부 수감자

2000년, 「한겨레21」에서 처음 병역거부 이슈를 소개할 당시 수감자는 1600여 명이었다. 이후 병역거부 수감자의 숫자는 한해 600~700명 정도로 고정되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병역거부자가 줄어든 탓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의 수감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2000년 이전까지 군사법정에서 항명죄로 일괄적으로 실형 3년을 선고했는데, 병역거부 운동 시작 이후에는 병역거부자들이 훈련소 입소자체를 거부해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이때부터는 다시 징집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기간인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조차도 실정법상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병역거부자들을 확산범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실형 선고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을 판사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다.

병역거부운동은 수감 기간을 줄인 것뿐만 아니라 구속수사를 불구속수사로 바꿔내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에도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수감되었다. 병역거부가 처음으로 사회 이슈로 등장했던 2000년에는 해방 이후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의 숫

자를 모두 합치면 1만 명이었는데,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는 1만 9천여 명에 달했다.

II. 더딘 제도적 변화

1) 국제 사회의 꾸준한 권고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18조에서 규정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다. 두 조항에 병역거부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해석규정인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의 77호 결의안(1998년)과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22(1993년)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두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인 권리행사임을 확인하고 일관되게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이광수, 2018: 29)

이에 병역거부운동은 유엔의 인권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했다. 일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 결정에 대해 유엔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을 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보상을 포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수차례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회원국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도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를 석방하고, 전과기록을 말소하며, 국방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다. 이는 병역거부운동이 적극적으로 유엔의 인권메커니즘 절차를 알리고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촉구한 결과였다.

한국정부는 각종 권고에 대해 매번 똑같은 변명으로 일관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남북관계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동안에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여론이 점차 좋아지는 동안에도 정부의 변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는 당장 병역거부자들의 처지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이 쌓여 훗날 무죄 판결들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 거듭된 국회 입법과 좌절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는 병역거부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환기시켜주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하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이다. 병역거부운동은 2002년 직접 대체복무 법률안을 만들어서 현실 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당시 병역거부 연대회의가 만든 법안을 토대로 국회 입법을 타진했고,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해온 인권변호사 출신인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로 2004년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전과자가 된 이후에야 국회에 대체복무 법안이 발의된 것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뒤로도 국회 내에서 대체복무 입법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18대 국회에서 김부겸, 이정희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번번이 대체복무 법안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거나 때로는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 되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전해철,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대체복무 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한 해에 수백 명씩 감옥에 가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옥에 가야만 했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다. 병역거부 운동과 몇몇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끝내 국회에서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3) 2007년 국방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좌절

2008년 12월 24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방부 스스로 발표한 지 불과 한 해가 지난 뒤였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18일 매해 75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1월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07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1년 만에 스스로 발표한 정책을 뒤집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여론상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다.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 중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근거였다.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전제로 어떤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리적이면서도 부작용이 없는지 그 방안을 모색한 것이었지만 보고서에 포함된 여론조사 중 일부가 전체 보고서의 전체를 뒤집는 근거로 쓰인 것이다. 비운 뒤에 땅이 굳기도 하지만, 한번 진행되던 사회변화가 갑자기 뒤집힌 뒤에는 기나긴 겨울이 찾아오기도 한다. 병역거부운동 또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의 악몽 같은 국방부의 결정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차디찬 겨울이 이어졌다. 병역거부자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옥으로, 차디찬 겨울의 감옥으로 들어갔다.

III. 변화의 시작

1) 사법부: 2015년 이후 무죄 판결 급증

입법부와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사법부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가뭄에 콩 나는 것보다 더 드물었던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2015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7년 청주지법의 무죄판결 이후 8년 동안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없었는데, 2015년에 3곳의 재판부에서 모두 6건의 무죄선고가 나오더니 2016년에는 4곳의 재판부에서 7건의 무죄선고가 나왔고 2017년에는 무죄선고가 급증하여 26곳의 재판부에서 모두 44건의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6년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연도	무죄 선고 횟수	재판부 수	특이점
2004	3	1	최초의 무죄판결, 예비군 거부 1건
2007	1	1	
2015	6	3	8년 만의 무죄판결
2016	7	4	항소심 첫 무죄판결
2017	44	26	항소심 1건, 예비군 2건
2018(8월말)	47	21	항소심 8건, 예비군 3건

까지 집계		
-------	--	--

출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 도입방안 실태조사」, 2018, 국가인권위원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무죄 판결문들에는 상급심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의 남다른 고민과 연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제인권규범으로서 자유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서 심도 깊게 살피거나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판결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이전 판결문에서는 볼 수 없는 입장이었다. “군인들이 복무 기간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 면제자, 군 전역자 등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대체복무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비폭력·평화주의에 바탕을 둔 범국가적 반전활동을 하는 것도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는 이야기는 그동안 병역거부 운동이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 반영된 문장이었다.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의 결정만을 기다리던 이전과 비교해서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무죄판결을 이어갔던 이 당시의 재판부들에 대한 “무죄판결로 자신들의 고뇌와 양심의 무게를 내보이고 있다”⁶⁾는 평가 결과 과장된 수사가 아니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일선 판사들의 ‘양심적 무죄판결’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어졌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터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은 빠르게 변해갔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병역거부자들은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시작해 2018년 말에는 감옥 안에는 병역거부자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⁷⁾ 아직 입영영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병무청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영영장이 연기되어 2020년 이후 설치될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양심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작동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병역거부권을 둘러싼 법적인 공방은 끝이 나게 되었다. 평화를 위해 가야할 길은 멀지만, 병역거부권에 대한 법적인 인정은 그 길의 출발선을 확고히 다졌다.

5. 병역거부 운동의 나아갈 방향

I. 인권과 평화의 가치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⁸⁾

4) 2016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 판결문.

5) 2016년 6월 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6) 한겨레21, 제1126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적 무죄판결”

7) 병역거부 수감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생겼다. 2019년 11월 22일 현재 3명의 병역거부자가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지만 어떤 대체복무제 도가 도입되는지에 따라 이 역사적 결정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극대화될 수도 있다. 대체복무 도입이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보장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뿐 사회적인 차별과 실질적인 처벌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대체복무 업무를 군사적인 영역으로 하거나 국방부의 관리 감독에 두거나, 대체복무를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처벌이나 다를 바 없게 하거나, 종교적인 병역거부자로 한정하거나 현역 입영 전에만 병역거부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병역거부 자격을 제한한다면 대체복무가 도입되더라도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해, 이제는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보다는 어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 어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지 결정하기 위해 평화와 인권의 시선으로 대체복무를 바라볼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왔다. 넓은 차원에서 보자면 대체복무제는 크게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형태여야 한다. 특히 병역거부권 인정의 핵심 쟁점인 양심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실질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병역기피에 악용될 우려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양심을 판별하려한다면 대체복무는 보통사람의 양심의 자유가 아닌 특별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감옥을 감내할 정도의 특별한 신념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기조는 병역거부자를 심사할 때도 중요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대체복무의 내용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어야 한다. 단순히 '병역거부자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군복무만큼 힘든 일'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사회 취약 계층의 복지를 개선하는 일처럼 시급하면서도 정작 일손이 부족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영역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II. 군사안보이데올로기 탈피와 군축을 위한 시민불복종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역거부권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과연 우리는 어떤 사회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지, 즉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나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⁹⁾라고 말했다. 칼과 같은 무기를 놓여 쟁기와 같은 농기구로 만든다는 뜻인데, 이는 병역거부자들이 줄곧 이야기한 성경 구절 “칼을 쳐서 보습을”을 인용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방

8) 이 글을 쓴 시점은 2019년 10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국방부가 정부법안을 발의하고 아직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이다. 정부법안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체복무 도입을 앞두고 그것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를 서술하는데 집중했다.

9)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7257> (최종 검색일 2019/11/22)

비를 증액하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5.3%의 2배가 넘는다.(이영아, 2019) 무기를 없애고 농기구를 만들자는 주장과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이 모순이 바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한국 사회의 현재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

강한 군대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는 일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도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병역거부자들은 오랜 세월 주장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를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다. 남북한 혹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군사력 대결로 치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한 안보불안을 겪었다. 2017년 초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핵 버튼 크기를 과시할 때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도보다리에서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악수를 할 때를 비교해보면 된다. 한미동맹이라는 외교적인 현실, 군수산업이라는 경제적인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의 철학과 비전은 군사적인 방식의 안보 개념을 탈피한 대안적인 평화를 향해야 한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크고 작은 전쟁과 무력 충돌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안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군사 갈등으로 안보상황이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군대와 무기에 의존하는 안보를 탈피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열어준 인권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양심의 자유가 진정으로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시민불복종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병역거부권의 인정이 시민불복종으로서 저항권을 강화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부당한 법과 질서에 자신의 양심을 바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이러한 저항권에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회변화일 때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튼튼해질 수 있다.

'이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원고입니다'

기사 및 문헌자료

국방부(2007). 보도자료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
이영아(201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칼럼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단행본

엄기호 · 김종대 · 강인철 · 정희진 · 서경식 · 조영선 · 하승우 · 최현정, 전쟁없는세상 엮음(2014), 『저항하는 평화』, 오월의봄
전쟁저항자인터네셔널(WRI)(2018), 여지우 · 최정민 역, 『병역거부변화를 위한 안내서』, 경계,
임재성(2011),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그린비,
전쟁없는세상 엮음(2014),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포도밭출판사
이광수(2018), 『대체복무 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박영사
조국(2001),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참고 사이트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 withoutwar.org
병역거부 아카이브 peacearchive.net